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704
----------	------

발의연월일 : 2021. 3. 11.

발 의 자 : 김은혜 · 유경준 · 하태경
이종배 · 최승재 · 배준영
성일종 · 권영세 · 이양수
김용판 · 조경태 · 조태용
류성걸 · 김태흠 · 윤창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공공택지구 지정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등 공공주택사업의 집행기관 및 관련업무자의 보안 유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에 해당 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전수조사에 착수하였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함께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수위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국

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자와 그 정보를 취득하여 부동산 거래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하고 공공주택사업의 공정한 집행 및 불법투기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등).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누구든지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제1항 중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그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천만원으로 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거래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①·② (생략)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①·② (현행과 같 음)
<u><신 설></u>	<u>③ 누구든지 주택지구 지정 또 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공개되 지 않은 정보를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 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u>
<u>③ (생략)</u>	<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
제57조(벌칙) ① <u>제9조제2항을 위 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57조(벌칙) ① <u>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 위반행위 로부터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 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 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 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천만원으로</u>
<u><단서 신설></u>	

<u><신 설></u>	<u>한다.</u>
	<u>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u> <u>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u> <u>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u> <u>제공 또는 누설한 자</u>
<u><신 설></u>	<u>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u> <u>지, 주택 등 부동산의 거래를</u> <u>한 자</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